

## 인보사 사태로 본 언론의 문제점

# 감시 기능 없는 첨단 의약품 보도

조동찬 /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

세계 최초 국내 제작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종양 유발 가능성’ 의혹 보도에서 식약처 압수수색까지, 이른바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뜨겁다. 기업과의 유착이 의심될 만큼 사측의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실어나른 다수의 언론뿐 아니라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사도 이번 사태의 원죄를 피하기 어렵다. 첨단 의약 분야에 대해 무지했고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 기업 브리핑의 역설, 첫 단서를 놓친다

2019년 3월 31일 일요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예정에 없던 문자가 들어왔다. 곧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니 이메일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보도자료는 ‘유전자치료제 자발적 유통·판매 중지·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개 중 1개 성분은 다른 세포로 추정’이란 제목으로 세 페이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3상)을 승인 받은 후 진행하던 중 1액에 포함된 연골세포의 성장을 돋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2액의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기술돼 있었다. ‘당초 2액의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제품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신장세포주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 되지만 ‘현재까지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관련 사실 뒤에 붙어 있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유전자, 연골세포, 신장세포, 1액, 2액 등의 어려운 의학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의 언론은 이해하지 못했다. 식약처의 보도자료는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를 의심할 만큼 너무 어려웠다. 연골세포 대신 발견된 신장세포가 미국세포은행에서 종양유발세포(tumorigenic)로 분류돼 있고, 약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신장세포가 들어 있는 약 중에 허가된 약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사실이 식약처 보도자료에는 없었다. 인보사 주사를 맞은 3,700여 명의 환자들이 앞으로 15년 동안 해마다 종양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게될 것이라 사실도 알 수 없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는 ‘종양 유발 가능’과 ‘약으로 사용 금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 있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브리핑에서는 ‘종양(원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할 ‘종양’이란 단어에 대다수 언론은 지나쳤고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효과와 안전성에는 문제 가 없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

다.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첫 단서는 역설적이게도 코오롱생명과학의 브리핑에서 등장했고, 인보사 사태를 촉발시킨 SBS의 보도는 코오롱생명과학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종양(원성)’에서 시작했다.

### 기업만 등장하는 기사들

SBS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말과 달리 인보사에서 발견된 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의 있음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신장유래 세포를 종양유발세포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세포은행 홈페이지와 신장유래세포를 쥐에게 투여했더니 종양이 발생했던 2008년 중국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sup>1)</sup>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모 언론의 종양 유발세포만을 부각시키는 보도 때문에, (인보사를 투

여 받은) 환자들에게 잘못된 불안감 및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식약처는 아무런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탄생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치료제에 대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 언론사, 이를 부인하는 기업 그리고 침묵하는 식약처 사이에서 여론의 향방은 주요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에 달려 있었다. 고백하건대 SBS에서 제기한 인보사에 얹힌 복잡한 문제들을 한겨레, 조선 등의 일간지와 JTBC, KBS 등의 방송사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 쇼> 등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준엄하게 이어가지 않았다면 인보사 사태는 허가 취소와 검찰 수사로 일단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칫 경

1) 조동찬, <[단독] 판매중지 인보사, 위험할 수도…종양 유발 가능성>, SBS 8뉴스, 2019.4.3.

2018년 7월 1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인보사 미국 FDA 임상 3상 돌입 및 국내 허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제 논리에 밀릴 뻔 했던 국민의 의약품 안전 문제를 대한민국 언론이 함께 지켜냈고 언론의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짚어볼 구석이 있다. 인보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첫 보도(2019.4.3.) 이후 약 보름 동안, 즉 인보사 사태의 초기 단계에는 SBS의 첫 보도와 상반되는 보도들이 주를 이뤘다는 사실이다.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했는데, <코오롱생명, ‘인보사’, 성분 아닌 세포 명칭만 바뀐 것>이라는 제목을 단 A, B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두 기사는 언론사와 기자가 다르지만 제목은 공교롭게도 같았는데 ‘세포는 바뀌었지만 약의 주요 성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A기사에는 세 명의 인터뷰이가 등장하는데 이○○ 대표, 유○○ 상무, 조○○ 팀장 등 모두 코오롱생명과학 측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개발자를 단독 인터뷰한 C기사는 “세계 첫 유전자 치료제라 겪게되는 시행착오”일 뿐이며 “오랜 임상 결과 등을 통해 약효와 안

“

인보사의 안전함을 ‘핵심 주제’로 뽑은 기사에는 학계, 정부 등을 두루 취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코오롱생명과학 측을 취재한 과정만 보인다.

인보사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누락돼 있었고 게다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스스로

종양 유발 가능성은 인정했다는

사실 마저도 간과했다.

”

정성은 검증됐다”는 개발자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 단독 인터뷰답게 이 기사의 인터뷰이는 코오롱생명과학 개발자 단 한 명 뿐이었다. <인보사 맞으면 암 걸리나? 그래서 방사선 조사 과정 거치는 것>이라는 제목의 D기사는 인보사의 종양 유발 가능성 을 정면으로 부정했는데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에 속한 인터뷰이만 등장했다. 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다른 시각의 후속 보도는 다양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다. 기업의 의견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는 것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학계,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취재원의 견해를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동료들과 치열한 갑론을박의 과정을 거쳐 누구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건 취재 기자와 언론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이다. 충실향 취재 절차를 통해 선택된 기업의 입장이라면 하나의 기사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인보사의 안전함을 ‘핵심 주제’로 뽑은 기사에는 학계, 정부 등을 두루 취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코오롱생명과학 측을 취재한 과정만 보인다. 세포치료제에서 세포가 바뀐 것을 두고 ‘성분이 바뀐 게 아니라’는 기업의 주장을 학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미국 식약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는지, 종양유발세포가 정말 치료제로 허가받을 수 있는 세포인지 등 인보사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누락돼 있었다. 게다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스스로 종양 유발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실 마저도 간과했다. 코오롱은 “종양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악성종양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SBS 8뉴스, 2019.4.3.)”고 언급했는데, 악성종양을 유도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해 인정해 버리고 말았다. 취재 기자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왜 종양 유발 가



1.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급락했다. ©뉴스1
2.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능성을 인정했느냐’고 물어야 했고, 답변을 후속 기사에 반영했어야 했다. 코오롱 관계자만 등장하는 A, B, C, D 등의 기사들은 투자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SNS와 증권 블로그에 퍼 날라졌고, ‘SBS 보도가 거짓’이라는 근거로 사용됐으며, 실제로 관련 주가를 반등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환자들을 더 곤란하게 했고 소액투자자들의 손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

### 언론의 첫 번째 원죄, 기사와 광고의 유착

2017년 7월, 인보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던 즈음, 수백 개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29번째 국산 신약>(통신사),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일간지) 등 발생기사로 처리한 보도가 있었고, <코오롱 ‘인보사’ 시판…국산 유전자치료제 꽂힌다>(경제지), <제약·바이오 ‘세포·유전자치료제’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경제지) 등의 기사처럼 인보사가 가져올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가미한 보도가 있었다. 또 <해외환자까지 찾는 ‘인보사’, 실제 사용해 본 의사의 평가는?>(보건의료전문지) 등의 기사처럼 실제 임상에 참여한 대학병원 교수를 직접 인터뷰해 <인보사의 효과는 해외에서 환자가 찾아올 정도>라며 극찬하는 보도가 있었고 <인보사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 ‘넷째 아이’…19년 투자 결실>(통신사) 기사처럼 코오롱 기업 자체 이미지를 높여주는 보도까지 있었다. 유전자 치료제의 식약처 허가는 발생기사로 처리해 보도하는 것만으로 해당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하물며 ‘해외에서 환자가 찾아올’ 만큼의 효과와 ‘19년 투자 결실’과 같은 극찬의 문장으로 채워진 기사들은 광고 못지않게 기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언론사와 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다면 기사의 팩트가 야기하는 기업의 광고 효과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이미 언론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이런 (기사와 광고의 유착) 행태를 (언론사들이) 거부하기 힘들다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할 만큼 기사가 광고와 유착돼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sup>2)</sup> 2018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자들 광고·협찬 영업 금지시켜 달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는데 기자가 기업 광

2) 김서중, <기사와 광고의 유착>, 경향신문, 2019.5.5.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월 21일 국회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및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고 판매까지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와 기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을 옹호하는 일련의 기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광고와 관련시킬 근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2017년 인보사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극찬하는 기사들과 2019년 인보사 사태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은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기사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취재하지 않았다. 기사 자체가 기사와 광고의 유착을 의심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평소 관리해온 언론사에게 먼저 방어 기사를 부탁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기자들은 그것을 '원죄가 낳은 기사'라 넣두리하곤 한다.

### 언론의 두 번째 원죄, 첨단 의약품 감시 기능 부재

2017년 4월, 인보사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식약처가 주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가 열렸다. 7명의 전문가 위원 중 6명이 인보사 허가를 반대했는데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세포치료제와 같은 유사계열 의약품과 직접비교 임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값비싼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효능을 고작 생리식염수(위약)와 비교해 효능이 있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둘째 '기존 치료보다 유효성 개선을 보기 위해서는 골관절염의 구조개선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골 재생효과가 없다면 '비싼 진통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골관절염 증상의 완화를 위해 유전자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해(risk)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허가 심의였고, 불허의 이유는 타당했다. 하지만, 두 달 후 2차 중앙약심위가 이례적으로 열렸는데, 심사위원 5명이 교체됐고, 불허는 허가로 바뀌었다. 2차 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있노라면 석연치 않은 점을 꽤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인보사 허가 과정을 들여다 본 기자는 없었던 것 같다. 언론은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솔직한 팩트를 질타하는 보도가 있었을 뿐이다. 식약처는 인보사가 골관절염 구조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허가 사항에 기록했는데, <인보사, 오해(誤解)와 이해(理解)>(경제지, 2017.7.13.), <인보사 효능 논란, 과연 타당했나>(경제지, 2017.7.21.) 등의 기사는 식약처가 팬한 사실을 적시해 인보사의 효능이 오해를 받고, 국가 바이오산업에 친물을 끼얹는다고 보도했다.

나중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인보사 식약처 허가 회의록을 보고 미국 하버드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생리식염수로 비교하는 임상시험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고, 국내 최고 대학 세포과학자는 "유전자 계통 분석(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미국 식약처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 유전자 계통 분석을 의뢰했다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게 밝혀짐)은 2015년부터 국제 주요 학회에서 권장해왔고, 세계적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내 최고 병원 소속 의학자는 "전 세계 세포치료제 중 재생 효과 없이 통증 감소만으로 허가를 받은 건 인보사가 유일하다"고 알려왔다. 2017년 4월과 7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에 심사위원들 사이에 어떤 의견이 오갔고, 이에 대해 국내 학계는 어떤 입장이며, 외국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언론은 취재하지 않았다. 이런

2017년 4월과 7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에 심사위원들 사이에 어떤 의견이 오갔고, 이에 대해 국내 학계는 어떤 입장이며, 외국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언론은 취재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미심쩍은 식약처 허가 과정은 묻혔고 인보사 허가 서류의 거짓은 3,707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여받은 후에야 밝혀졌다. 인보사 사태에는 첨단 의약품을 감시하지 못했던 언론의 책임이 크고, 나를 포함한 SBS도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2017년 4월과 7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에 심사위원들 사이에 어떤 의견이 오갔고, 이에 대해 국내 학계는 어떤 입장이며, 외국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언론은 취재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미심쩍은 식약처 허가 과정은 묻혔고 인보사 허가 서류의 거짓은 3,707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여받은 후에야 밝혀졌다. 인보사 사태에는 첨단 의약품을 감시하지 못했던 언론의 책임이 크고, 나를 포함한 SBS도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2019년 6월 초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압수수색하던 날, 일상의 피해를 기꺼이 감내하며 그동안 인보사 관련 팩트가 의미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준 과학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고맙다'고 했고 '승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남게 돼 취재기자로서 착잡하다고' 했으며 '나 역시 인보사 인허가 과정을 정확하게 감시하지 않은 원죄가 있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은 전문가들의 통제 역할 또한 미흡했다는 반성으로 이어졌고, 그 결말은 다시 원죄에 대한 고민으로 회귀했다. 어쩌면 첨단 의약품 감시 기능 부재에 대한 언론의 원죄는 인보사 사태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